"소수 토지 독점 불공정"

민주 이낙연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내주 발의
소유 제한·이익 환수·유휴토지 과세 골자

"토지 가치 상승, 국가가 투자하는 인프라 덕
경제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 병리 벗어나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소유상한법 제정 및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관련 입법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에는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나 광역시는 400평, 기타 소도시 등은 허용 면적을 넓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광역시는 법 시행 전 5년 실거주시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이용·개발·처분 의무를 면제하되, 이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취득 택지는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부담금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개발이익 측정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환수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 제정 이후 최저 100분의 20까지 후퇴한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IMF 사태 이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부활 논의도 있었으나 중복과세 우려가 있어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지만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가액 22.1%)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가액 57.6%)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가액 73.3%)를 갖고 있고, 상위 10%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92.4%(가액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형성해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며 "반면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고,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며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이라며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시비를 없애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초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조세 저항 우려를 지적하자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법안은) 내주쯤에 발의할 것 같다.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되는 진정한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대전환 위한 새로운 리더쉽 필요"

조용식 전 전북청장, 민주당 입당… 내년 지선 익산시장 출마 예정
"4기 민주정부 탄생 시민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설 것" 입당 이유 밝혀

조용식 전 전북경철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되는 진정한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4기 민주정부 탄생에 국민과 함께 익산시민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서겠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으며 국민 삶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민하는 정당"이라며 "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식 전 청장은 "익산시가 날로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익산시에는 책임지는 리더십과 안정된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익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유출율을 기록하며, 호남 3대 도시의 위상마저 빼앗겼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함께 가야한다. 국가 장기발전계획, 대선 100대 공약에 익산의 현안과 미래 활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예로부터 조상들은 젊은 시절 중앙에서 일을 하다 경륜이 쌓이면 고향에 돌아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전통을 세웠다"면서 "아름다운 전통을 본받아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같은 날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조 전 청장은 "지난 34년 공직 생활 대부분을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앞장섰다"며 "풍부한 공직 경험이 치안과 행정이 통합되고 건강한 공동체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길 희망한다"고 소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유호상 기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

민주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6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해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불임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도의회 교육위, 교육시설 안전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6일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시 도내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는 개원은 했지만 공사가 미완료된 '전주새뜰유치원'과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만성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장마 등의 풍수해로 인해 도내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어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학교시설공사 현장은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미 사전점검을 완료한 상태인 줄 알지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집중호우를 예상해 미리 점검하는 것은 여름철 도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철저한 안전을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내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조했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지역의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전주시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5건 선정·발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우수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사례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세정과)'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일자리청년정책과)', '개방형 창의도서관(삼천) 리모델링(시립도서관)',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조성(신도시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통합돌봄과, 체육산업과, 먹거리정책과, 문화정책과)' 등이다.

세정과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으로 동산을 압류,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과 긴급자금지원,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립도서관은 정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되고 개방적인 도서관을 만들었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안전한 도서관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도시사업과는 LH와 지역개발공사와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지제 산책로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했다.

통합돌봄과 등 4개 과는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는 평을 얻어냈다.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사업은 2019년 9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에 의해 제정된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라 시행됐다.

의회 관계자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다수의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지적 사항도 적지 않았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 등에 모범적인 사업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번 추경 조속 처리토록 온 힘"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전북 현안에 국가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곳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국가재정 전반을 비롯해 예산 및 기금과 관련된 법률도 다루고 있다.

예결위가 다루는 재정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본예산 558조와 지난 3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이번 달 2일 정부가 제출한 33조의 추경을 합하면 600조 원 수준에 달한다.

이번에 구성된 21대 국회 2기 예결위가 심의,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이며, 기재부는 이를 위해 앞선 5월 31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전체 593조원 규모에 이르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의 예결위에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오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까지 야당과 합의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의 규모는 코로나19 전으로 회복됐지만, 민생경제 여건은 아직 어렵다"면서 "이번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주요사업에 관한 국가예산 확보를 기재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이며,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김제, 부안의 현안사업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5대 국회 이후 20여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감시해 온 의정감시 전문단체로,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공신력을 쌓아왔다. 특히, 이번에 이원택 의원이 선정된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것으로, 의정활동을 입법·예산·상임위·공직자 윤리 등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계량화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1년 간 이뤄진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약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공신력과 전문성 면에서 최고의 입법감시 전문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이번 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다"면서 "김제와 부안 주민들께서 의정성과와 노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해야"

송지용 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6일 "운수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사회필수인력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자율접종 물량을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주민센터 공무원 등 대민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분야 종사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확산시킬 위험도 크다"며 "이에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사적모임 제한도 완화돼 모임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음식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회필수분야 백신 접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시·도지사에 자율접종 물량 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